

“도·농 균형발전·지역대표성 강화 선거구 획정 방식 마련을”

성경찬 도의원, “인구 규모 중심 획정, 특정 도시 쏠림 등 지속 발생”

전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의원이 19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도·농간 균형발전 및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편차 기준의 준수 뿐만 아니라 생활권 지세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인구 규모가 중심논리로 적용돼 특정 도시가 선거구를 독점하는 폐단 등 여러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성경찬 의원은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기준 인구편차를 기존 4:1에서 3:1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농어촌 지역의 많은 선거구가 통제될 예정이다”며 “이러한 현상이라면, 농어촌 지역들은 법정 최소 기준인 1석만을 겨우 유지하는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광역 단위 의원 정수 배

분 현황을 보면, 인구 규모 중심의 논리 또한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광역 간 형평성 있는 의원 정수 배분을 위한 정수 조정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강원도와 전북의 경우 인구는 각각 약 159만 명과 180만 명이나 의원 정수의 경우 각각 46명과 39명으로 전북도가 인구는 더 많으나 의원 정수는 더 적은 실정이다.

끝으로 성경찬 의원은 “정부와 국회 는 인구 규모 중심이 아닌 도·농간 격차 해소와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합리적 선거구 획정 방식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호상기자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즉각 제정을”

“지방정부 자율 추진·중앙정부 적극 지원” 강용구 도의원, 대정부 건의안 발의·촉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용구 의원(남원)은 19일 제383회 임시회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방소멸과 관련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법’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으로 청년이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정책과 함께,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추진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추진에 있어 공모 방식을 지양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지방소멸 지수 등을 활용한 지방 성장중심 재정 지원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인구 데드코어가 시작됐으며,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자연감소가 발생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으로 2005년 5조4,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됐지만, 균특회계 지원이 오히려 수도권은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 대형 SOC 사업이나 획기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에, 수도권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 2020년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50.1%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방소멸의 위기가 정부

가 주도하는 성장지점 위주의 불균형 성장전략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지난 2008년 국가균형발전법 제정으로 2005년 5조4,000억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됐지만, 균특회계 지원이 오히려 수도권은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러한 가운데 정부 대형 SOC 사업이나 획기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해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앞선 데 달린 격으로 코로나 19는 이러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용구 의원은 “생존의 기로에 있는 지방은 이런 소리조차 사치에 가깝다”라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역발상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기자



19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제10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지방의회 발전 기여 공로

김명지·김이재·김철수·나기학·성경찬 이정린·진형석·최영심 도의원, 우수의정 대상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 김명지(전주), 김이재(고창), 나기학(군산), 진형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이 대한민국의회의장의 장려의회가 수여하는 제10회 우수의정 대상을 받았다

우수의회 대상은 지역현안 해결 및 제언을 위한 조례제정과 정책제언, 지방자치에 주민참여 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방자치 지평을 넓히고, 지방의회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한다.

상패는 19일 도의회에서 송지용 의장이 전달했다. 김철수 의원은 농산경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일지리와 민생경제 전라산악농정분야 도정 시책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제안했으며, 가족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위상 예방과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와 신협단지 진흥 및 구조조도화 촉진 조례 등의 제정을 주도했다.

김명지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체육진흥추진회를 개칭하고, 건설업체 페이퍼링

퍼니 근절을 위한 제도마련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김이재 의원은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와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나기학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인 진료거부 중단 및 비상진료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으며, 해안쓰레기 관리조례와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조례 제정 등을 이끌었다.

성경찬 의원은 도의회 후반기 원내대표를 맡아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를 이끌며 도민들의 안전한 환경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울러, 지역균형발전과 전북도정의 효율화, 전북체육발전을 위한 계 획수립 등을 촉구했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과 전북도 도민 평가 구성 조례 등을 발의했다.

이정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홍수피해를 입은 지역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활동을 주도했다. 자동차등불변호관발급대행사 관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건설기술활용 촉진 조례와 전통문예 진흥 및 지원조례를 발의했다.

진형석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북도 사회서비스 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

마한역사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와 상권후진지대로 활성화, 전북교육청 기록물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치입법활동도 펼쳤다.

최영심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보육교사와 택배노동자 교육공무직 등의 처우개선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의정활동을 보였다.

또한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에 사립유치원 포함을 촉구했으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와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 등을 발의했다.

수상 의원들은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발전 진정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위해 도민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용 의장은 “지난 한해동안 민생을 살피고 도민을 대변하는 활동에 앞장서줘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전북형 자산형성 지원사업 마련을”

황영석 부의장 “청년 미래 설계 희망사다리 마련 위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전북형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부의장(환경복지위·갑제1)은 19일 제383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마련을 촉구했다.

황 부의장에 따르면,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국가비대칭사업이며, 지급조건 역시 까다



로워 중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타 지자체의 경우 전북도와 달리 자체사업으로 다양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희망주택 청년보증, 부산시의 경우 청년희망적금 2400을,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청년 13(일+삼)통장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 역시 휴먼뉴딜 분야에 신규 정책으로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세분화하고 대출 매칭대상 역시 기존 정책보다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황영석 부의장은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소득 및 자산의 격차가 점점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며, 청년들에게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를 마련해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유호상기자

“전북 주거·건축통합지원단 출범해야”

조동용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 3)이 ‘전라북도 주거·건축통합지원단’의 출범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조 의원은 19일 제3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건축안전센터, 공공건축지원센터,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결합한 ‘전북도 주거·건축 통합지원단’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주거복지 공공건축지원 등에 대한 정책 마련 및 광역지원센터 구축은 지난 2018년부터 여러 도의원들이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립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조 의원은 “도내에는 65세 이상의 1인 가구, 조손 및 소년소녀가장·수급가구, 다문화·외국인가구, 비주택 거주가구 등을 포함해 약 23%의 주거취약가구가 있는 등 광역 차원의 주거복지 정책 마련 및 센터 운영을 통한 지원이 시급하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도 차원의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전담인력, 실태조사 등의 실질적 지원계획이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광주 철거민들 붕괴참사와 같은 건축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건축



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주거복지, 건축안전, 공공건축지원, 그리고 도시재생까지 포괄한 4가지 영역의 광역지원센터는 반드시 통합지원단의 형태로 함께, 하나의 조직으로 출범해야 한다. 통합지원단 내에서 상호연계 업무프로세스를 통해 각 업무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만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를 보장할 수 있다”며 “주거권과 안전은 더 이상 사적 영역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시대적인 요구라는 것을 전북도가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장 내년 본예산 반영 및 조직 개편을 통해 내년에는 반드시 전북도 주거·건축 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켜 하루라도 빨리 도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주거와 건축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상 광역 건축 안전센터 운영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전북도의 안전불감증과 행정무능을 보여주는

최영규 도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이 전북도의 교통정책이 환경과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일 전북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정부 이후 거의 10년 동안 광역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부재하다”면서 “풍경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전혀 없는 상태로 연로해진 주민들은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 관광객들도 위험한 자동차도로에서 목숨을 내걸고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은 “이제는 환경이 지역의 자원이자 자산인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전북도가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5개년 계획수립으로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진 만큼 당장 내년부터라도 계획에 따라 도내 자전거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집담연락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제는 환경이 지역의 자원이자 자산인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전북도가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5개년 계획수립으로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진 만큼 당장 내년부터라도 계획에 따라 도내 자전거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집담연락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전북 지방도·경관도로 조성 관광 활성화”

김종식 도의원, 5분 발언서

전북도의회 김종식(군산) 의원이 19일 제38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북 지방도의 균형적 사업추진과 함께, 경관도로로 조성해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란 국토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서, 전주-김천 노선의 경제성 등 추가검토”는 전북도민에 대한 희망고문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전북도 지방도 관리가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성 논리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정부를 향해서는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도내 지방도는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5년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전라북도 SOC 종합전략 연구’에 따르면, 전북은 중추도시에 인구, 도로, 철도가 집중돼 교통혼잡 등이 발생하지만 그 외에 지역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낮아 경제성과 수요 확보가 어려워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특히, 도내 지방도의 안전성이 낮게 평가되는 것 역시 소외지역의 불균형과 관계가 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르면, 전북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4



년 17.9명에서 2018년 13.5명으로 다소 낮아졌지만,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였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교통안전 성과지표 평가에서 전북은 76.05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김종식 의원은 “도내 노후화된 도로와 산악지형으로 인한 선형 불량 도로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구간의 도로개선사업이 경제성과 수요 확보가 어려워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기간 연계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경관도로로 조성해 전북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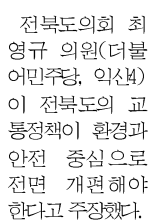
김대중 도의원, “국가사업 확보 현안 추진 적극 나서야” 주문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 2)이 19일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1년 남은 민선7기 전북도정이 긴장감을 갖고, 국가사업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전북패싱 논란이 일어난 데에는 전북도의 능동 대응과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대규모 국가사업발굴 및 중요 이슈와 현안사업 관련 대응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 재단의 주요 관리감독 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호상기자



최영규 의원은 “이제는 환경이 지역의 자원이자 자산인 시대다. 지금이야말로 환경과 안전을 위해 전북도가 행동해야 할 시간(Time for 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5개년 계획수립으로 첫 번째 단추가 채워진 만큼 당장 내년부터라도 계획에 따라 도내 자전거도로 확충 등 인프라 구축사업 및 교육·홍보 사업을 적극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관련 예산과 집담연락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대중 의원은 “국가사업 확보 현안 추진 적극 나서야” 주문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 2)이 19일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1년 남은 민선7기 전북도정이 긴장감을 갖고, 국가사업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전북패싱 논란이 일어난 데에는 전북도의 능동 대응과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대규모 국가사업발굴 및 중요 이슈와 현안사업 관련 대응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 재단의 주요 관리감독 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광기간 연계성과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주요 관광지로 연결되는 지방도로를 경관도로로 조성해 전북 관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도의원, “국가사업 확보 현안 추진 적극 나서야” 주문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정읍 2)이 19일 제383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1년 남은 민선7기 전북도정이 긴장감을 갖고, 국가사업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 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전북패싱 논란이 일어난 데에는 전북도의 능동 대응과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대규모 국가사업발굴 및 중요 이슈와 현안사업 관련 대응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핵심 인프라인 금융센터 건립과 관련해 재단의 주요 관리감독 기관 중 하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관련 기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호상기자